

북이 가져간 년, 뿔뿔히 떠난 그들을 기억하며

무연고·노숙인, 봉헌해마다 대구서 최소 62명... "의포 등 지원제도 허점,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2015년 12월 23일 (수) 09:51:51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 pnews@pn.or.kr](mailto:pnews@pn.or.kr)

"당신을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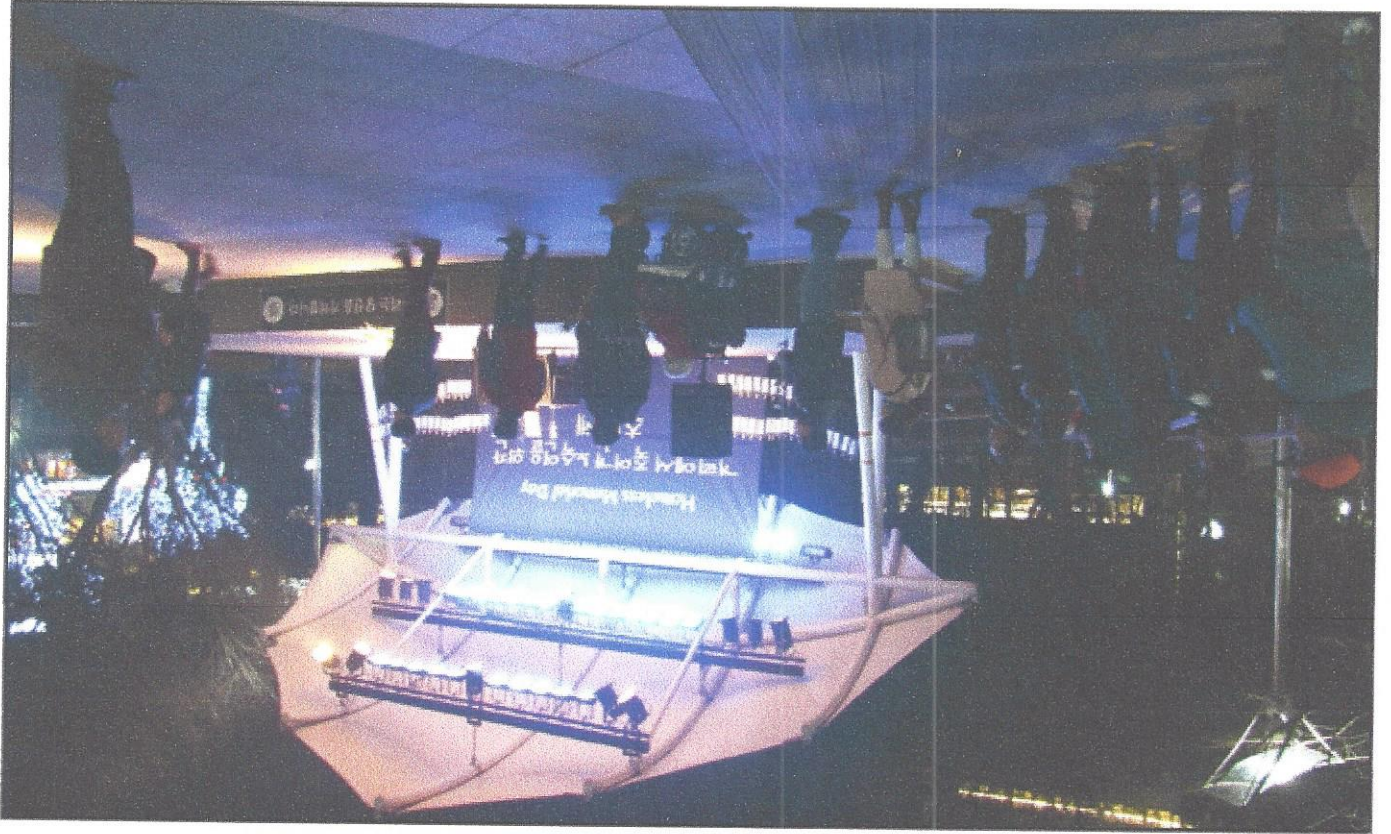


▲ '2015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분향소가 차려진 무대 위에 놓인 옷과 신발, 국화꽃(2015.12.22. 대구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대구에서 노숙인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추위와 건강 등으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노숙인을 추모하는 공연과 함께 지원제도의 문제를 비판했다.

12월 22일 저녁 대구 2.28공원 중앙무대에서 대구지역 9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반민군네트워크'가 '2015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가졌다. 추모제에는 대구쪽만삼당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 힘을 비뿔한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료진료소 운영, 동지관측나누기, 노숙인 클과 사진 전시도 진행됐다. 2009년 처음 열려 올해로 7회째인 노숙인 추모제는 일 년 중 밤

이 제임 린다는 동지들을 맞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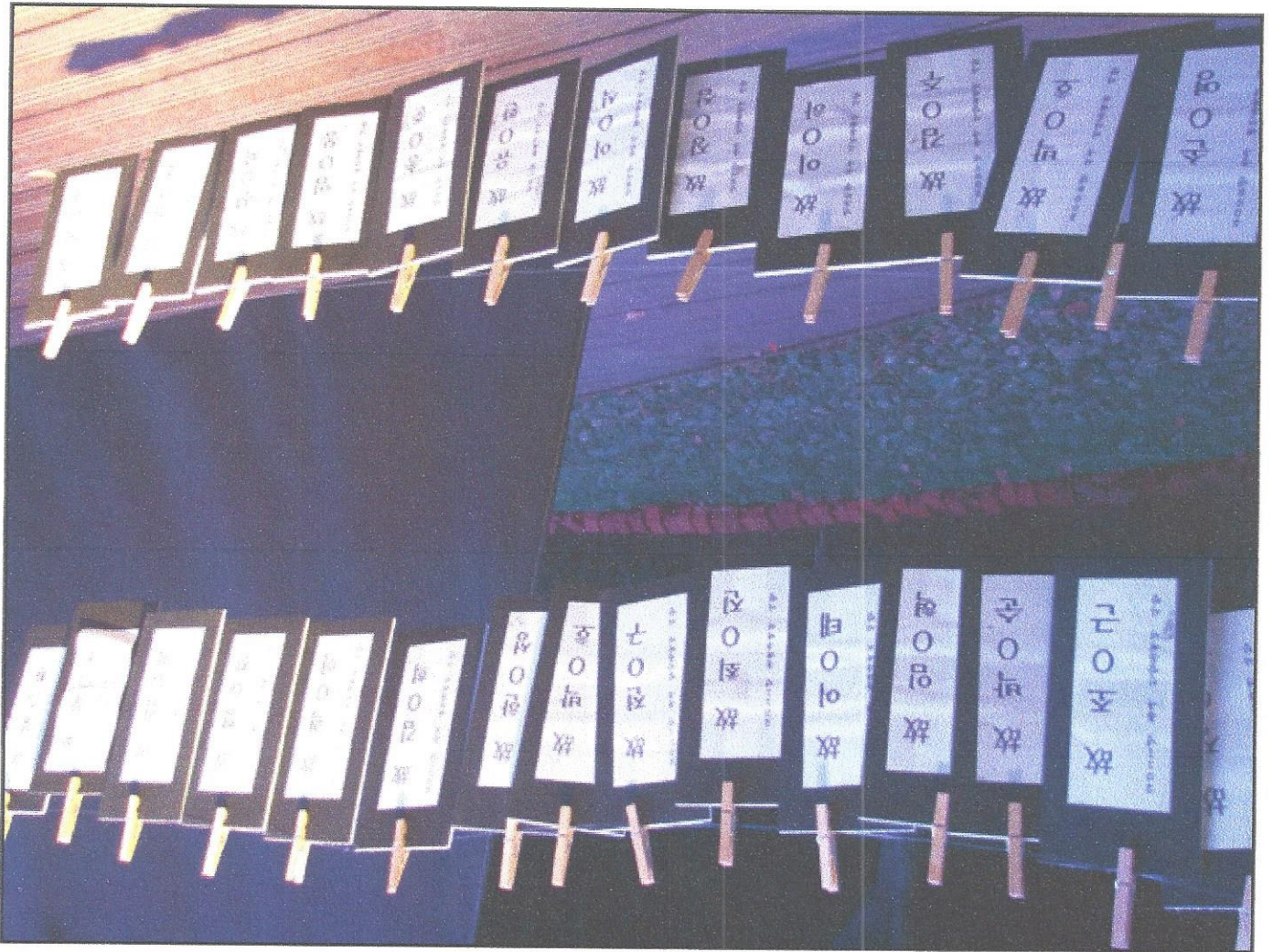


▲ 홀쭉하게 떠난 노숙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2015.12.22. 대구2.28운동원) / 사진, 문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2015년 대구의 무연고·노숙인 사망자는 월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62명(중구 5명, 동구 17명, 서구 17명,

남구 6명, 북구 12명, 양서구 3명, 탄성군 2명, 수성구는 미천계)이다. 추모제에서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
고 그들의 죽음을 역사로 기억함을 되새겼다.

장민철 대구북방상담소장은 "연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도 함께 기억하자"며 추모제의 시작을 알렸
다. 신경원 노동자시인회는 자작시 <부활> 낭송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들을 기렸다. 그는 "우리
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와 그의 삶이다. 연말연시를 돌고 돌수록 몸위기가 만연하
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년도미상 동대구역에서 사망한 유0환"...본향소에 마련된 위패에는 대부분 '년도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2015.12.22. 대구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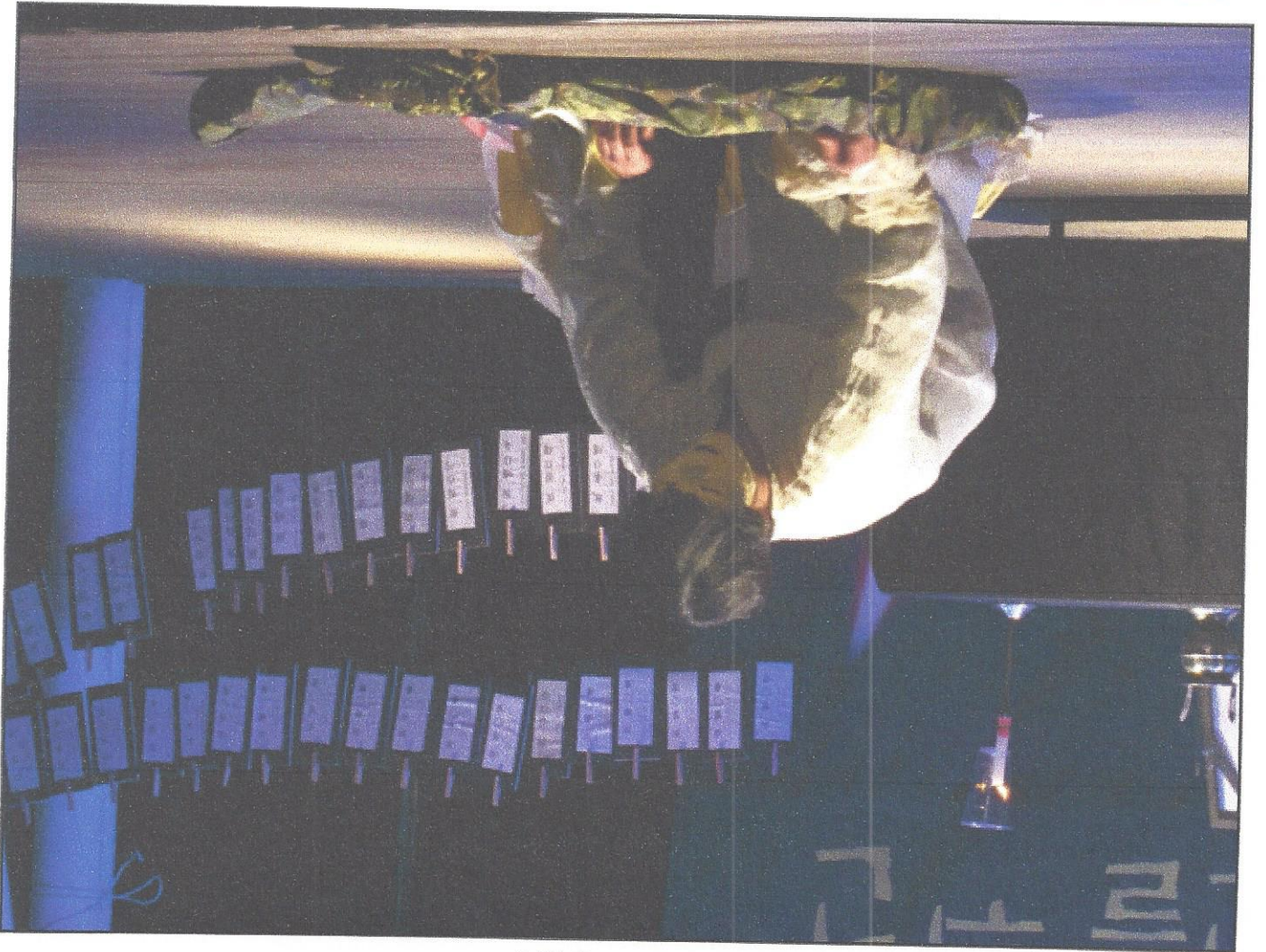
▲ '2015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불쌍하게 떠난 노숙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2015.12.22. 대구2.28신문) / 사진. 윤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죽방겨추민 당사자 증언도 이어졌다. 60대의 변씨는 "양땀값, 추위를 물려주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며 "시큰조금 물려주고 축하기, 복서기에 임하지 마라고 한다. 오�히려 출고 더공 더 더 령거리가 원 요한 것을 모른다"고 정부정책과 행정기관을 비판했다.

박남권(39) 대구희망진포소 의포진은 "무포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도 노숙인 10명중 6명은 받지 않는다. 경사 결과 큰 별이 새린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각 구청마다 지원제도가 있지만 바큰여나 선택적포제 등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반출종과 거리외 노숙인들, 죽방겨추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민 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희망진포소는 대구 중구 광범원 별관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종합 진료하는 곳이다. 대구죽방겨추민소와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무료진료 보던 곳을 통합해 작년 11월 문을 열었다. 노숙인과 죽방겨추 민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진료와 의료지원, 대구의포원 등에서 추가진료가 이어지 다.

그는 "편의점소" 한마디를 한 뒤 몇몇 목욕탕을 소개했다.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화하라고 죽을 선 사람들의 문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노인이 있었다.



▲극단 '함께사는세상' 조인제씨가 노숙인의 삶을 담은 추모 공연을 하고 있다.(2015.12.22. 대구2.28문화원) / 사진, 문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영상을 기억합니다"...추모제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2015.12.22. 대구2.28문화원) / 사진, 문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한편 정부 유사·중복사업 동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등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사·중복사업이란 과도한 중복진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동일·유사한 부분 있으면 이를 동폐할해 원원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자체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빈곤여부 등 취태를 반영해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취약 지원이 절실히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상 선정도 명확한 기준 없이 2개월 만에 지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용익 의원 자료에 따르면 동폐할 대상인 복지 사업 중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대상 사업이 전체 60%에 이른다. 대구지역에서 동폐할되는 사회복지사업은 56개이며 227억원의 예산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원문 보기 원문 보기